

## 서문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시작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소련의 와해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소용돌이는 과거 러시아의 혁명 및 그 전과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transition)이라는 사상 초유의 실험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실험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이 시작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 이 경험은 진지한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해명을 요하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탈사회주의 현상을 해명하려는 이론적 작업의 성과는 아직 미미하며, 국내에서는 특히 그렇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초기에 유행하던 민주화이행론 또는 고전경제학적 시장주의에 근거한 설명방식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해명하려던 시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수정을 요청받아 왔다. 왜냐하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정치변동'과 '경제체제의 변경' 그리고 '사회의 다원화'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 및 국가

의 (재)건설'이라는 중층적 과정이 동시적이며 전면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결국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단순한 구도로 도식화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좀 더 심대한 역사적 거시변동과 전략적 미시변동을 수반하고 있기에 매우 복잡한 이론적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도전은 학계에 기존 비교정치학이 구축한 학문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반영하듯 서구 학계에서는 비교정치학과 탈사회주의 지역연구가 수렴하면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해명하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소련학(Sovietology)의 틀을 넘어 새로이 각광받는 연구영역으로 정립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흥미로운 학문적 도전이 한국 학계에는 그다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를 지역연구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제한적인 시각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이를 비교론적 견지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비서구 지역 등에 대한 통합적 연구틀 안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좀 더 포괄적인 문제의식의 설정과 학문분과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 국내 학계는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세계정치』 13호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20년의 평가”라는 거대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주제가 워낙 방대하여 한 권의 책자로 다루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의 시간 속에 쌓인 흥미로운 경험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국내 학계에도 이런 논의들을 소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다행히도 국내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

이 여러분 계셨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시던 연구의 성과들을 논문집으로 모으는 데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이번 호에 게재된 글들 가운데 앞의 세 글은 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뒤의 세 글은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실제적 측면을 조명해 주고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 민주주의의 건설과 관련하여 김연규는 38개에 이르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민주주의 이행의 현황과 민주화 성공의 요인을 민주화이행론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정리하고 있다. 특히 동구와 유라시아 국가들의 최근 민주화 추세를 검토하면서 동구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이행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진전된 이행이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도약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들을 필자는 역사문화적 구조, 서구의 압력, 정치제도, 자원부존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주의 이행에서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주화의 환경으로서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경험과 같은 구조적 선결 조건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럽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역사적 친밀성을 형성해 옴으로써 민주주의 이행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 이런 주장과 잘 부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구조 중심에서 벗어나 행위자 중심의 분석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설명에 적절하다는 한병진의 주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의 유라시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의

원인과 관련하여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요인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는 그의 지적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니는 한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주장이다.

비교정치와 지역연구의 괴리라는 한국 풍토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글을 시작한 한병진은 양 접근의 통합적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분야에 산적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주제들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먼저 탈공산주의 시장개혁과 정치개혁의 상관관계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하여 잘 해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탈공산주의 시장개혁이 정치개혁을 수반하게 될 경우 공산당 엘리트의 기회주의가 폭발하면서 총체적인 체제붕괴의 결과를 수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탈사회주의 동유럽, 구소련, 중국에서 개혁의 정치경제가 기존 정치경제론적 설명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가를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제하였다. 특히 정권형태의 시장경제에 대한 효과는 탈사회주의 경험에서도 복잡한 설명변수들로 인하여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필자가 탈사회주의 국가건설이란 주제를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험에서 나타난 정치제도와 경제발전 및 시장개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면서 행위자 중심의 합리주의적 접근에 입각한 탈사회주의 제도건설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탈사회주의 정치변동 중 특히 구소련 국가의 정치변동은 최근 중남미와 중동 지역

연구자들이 개발한 선거권위주의론을 통해 보다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필자는 탈사회주의 연구자들이 지역연구의 특수성과 맥락을 모델 정립을 통해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동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 연구의 지역적 고립성과 탈이론적 경향을 극복하는 도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 두 편의 글들이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전반적인 민주화 정도와 그 성패의 원인 및 민주화 지체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해설하고, 또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험이 지닌 지역적 특수성과 맥락을 비교정치론적 모델을 통하여 설명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면, 김태환의 글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권위주의 정권의 개혁저항의 유형화 및 모델화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중 권위주의화 된 국가들은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경제개혁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필자는 그 이유를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그는 독재정권의 개혁저항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의 성격과 지배 엘리트들간 정치적 지배연합의 형태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변수의 상이한 조합에 따른 지배연합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서 개혁에 대한 저항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대국가와 가산연합이 조합된 경우, 풍부한 자원지대를 폐쇄적인 정치연합이 통제하고 독점할 때 경제개혁이 지체될 수 있으며, 설혹 지대를 생성하는 천연자원이 부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대를 역시 유사한 가산연합이 독점하여 정치화할 경우 유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자원지대가 분배연합에 의해서 공유되는 조합에서 분배연합을 구성하는 제3의 세력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가 높

을 경우, 경제개혁은 이들 세력의 이익에 의해서 크게 제약을 받게 되며, 이와는 달리 자원지대가 부재하고 정치적·행정적 자원 역시 열악할 경우, 정치 엘리트들은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을 선택함으로써 광범위한 정치경제개혁을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치·경제개혁이 가장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자신의 유형화가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밝히면서 후속 작업들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있다.

한편 박수현은 탈공산주의 체제전환기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러시아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의 시민사회는 구소련 말기의 운동사회가 탈동원화되면서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약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이며 출발하였고, 옐친 정권은 정치적 대결구도 속에서 시민사회에 대하여 역동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러시아 시민사회는 여러 불리한 물질적 및 제도적 여건 속에서 취약성을 유지했다. 약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라는 유산을 옐친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푸틴 대통령은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협력, 포섭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필자는 서구학자들이 러시아 민주주의 후퇴의 증거로 자주 거론하는 ‘규제’의 전략보다 ‘협력’과 ‘포섭’ 전략에 좀 더 주목하면서 2001년의 시민포럼이나 2005년 이후의 공공회의소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연계기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써 러시아적 민주주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의 단초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필자가 강조하

였듯이 러시아의 약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가 전통적인 국가-시민사회 간의 제로섬적 대립관계를 벗어나 동반적 강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가 국가와 대립적 관계의 형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시민사회론 전반에 대하여도 중요한 이론적 시사를 가지는 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첫 번째 흥미로운 점은 선거가 각국 정치과정의 주요한 기제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전환기 동유럽 여러 국가들의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각국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유럽 선거민주주의 확산과 더불어 신생 정당들이 대거 출현하여 사회와 정치를 매개하는 정치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체제전환기 동유럽의 정당 발달과 관련해 구공산계 정당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산당 독재는 종식되었으나 당이 완전히 해체되어 사라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다수 공산당이 이념적·조직적 변신을 통한 생존에 성공하였다. 특히 이전 체제로부터 물려받은 조직과 물적 자산을 기반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여타의 신생정당들과 정치적 경쟁을 벌일 수 있었고, 그 결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체제전환기 정치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진승권은 이러한 동유럽 선거와 정당의 동학을 폴란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폴란드가 공산체제로부터 물려받는 정치적·사회경제적 유산이 체제전환기에 형성되는 정치역학과 어우러지면서 '선거'

라는 정치변동의 계기를 통해 정당구도의 성격과 그 변화를 창출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폴란드에서는 공산체제 붕괴 이후 6차례의 총선이 치러졌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구공산계열의 정당과 솔리대리티계열의 정당이 양대 정치세력으로 번갈아가면서 집권하였다. 하지만 최근 2005년과 2007년 총선에서 구공산계인 민주좌파연합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우파 성향의 시민연단과 법과정의당이 양대 정당으로 부상함으로써 폴란드 정당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관찰은 어쩌면 기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와 정당정치 역학의 패턴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역학이 이제 폴란드에서 형성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향후 폴란드의 정치변동에 대한 궁금증을 키워 주기에 충분하다.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방법으로 충격요법에 의한 급진적 접근법과 점진적 접근법 그리고 제도주의 접근법 간의 논쟁은 대단히 뜨거웠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 체제전환경제에 관한 실증분석은 시장경제 건설에 있어서 거시경제 안정화, 가격자유화와 함께 초기조건과 제도구축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라는 대조적인 전략을 선택한 대표적 사례다. 김영진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초기조건 및 체제전환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들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양국의 상이한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은 1차적으로 실효성 없는 체제전환전략 및 무기력한 경제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주요 수출상품의 낮은 가격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걸었지만, 2000년대 들어 고유가에 힘입어 경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되돌려 놓았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1차적으로 자국의

조건에 부합하는 체제전환전략과 균형 잡힌 경제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2차적으로 주요 수출상품가격의 상승 경향으로 인해 초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세기가 전환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뒤처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능가하였지만, 2007년 중순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것은 유가 하락이라는 요인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가 외부적 충격에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이며, 이는 1990년대에 도입되어 실시된 충격요법 모델에 기초한 체제전환전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점진주의 전략은 체제전환 초기에 산출의 극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었으며 성장잠재력의 현실화에 더 유리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도성장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결국 필자는 이 비교를 통해 성공적 경제체제 전환의 기둥이 될 적절한 제도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의 변환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학술적 해명을 요하는 과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 논문집을 통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해명의 시도는 우리 학계가 이처럼 중요한 연구주제의 광맥에 막 도달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 언급은 이전의 연구들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기존 연구들을 이어받아 지속 및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 관련 연구자들의 반성과 새로운 결의로 이해되었으면 좋겠다. 이 논문집에 게재된 몇 편의 글들로 표현된 결의는 앞으로 우리 관련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좀 더 다양한 논의와

관점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의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라는 현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연구들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싶다. 누구보다 연구와 교육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한 옥고를 써 주신 필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준 국제문제연구소의 나호성, 한송이, 이찬송 간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난히 더웠던 여름에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논형 식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진을 대표하여  
신범식